

거시경제학의 눈으로 본 식민지 근대화론*

조 장 옥**

논문 초록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정리되어 있는 식민지기 자료를 바탕으로 (1) 과연 식민지기에 경제성장이 있었는지, 나아가 (2)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이 한국의 고도성장을 인과(因果)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식민지기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의 가난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와 소비에서 차지하는 식료품과 의류 같은 비내구재의 비중 그리고 1차 산업의 인구 등에 변화는 있지만 매우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식민지기 기층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었다. 물적, 인적 유산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인과하기에는 투자가 지나치게 적었고 물적 유산의 경우에는 남한에 남겨진 생산시설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그리고 6.25전쟁을 치르면서 대부분 소실되었다. 인적 유산의 경우 해방 후 1960년대 중반까지 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적 자본과 비교하면 식민지기 인적 자본의 축적은 무시할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자체가 고도성장을 인과(因果)할만한 것은 못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총독부와 박정희 정부를 강한 정부로 엮는 것은 건강부회일 뿐이다. 제도의 경우에도 그것이 필수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내재적 발전요인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에 머문다는 점, 그리고 패전 이전 일본의 제도가 발전을 유인하는 유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식민지기의 제도를 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의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핵심 주제어: 식민지 근대화론, 인적 자본, 제도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6, N1

투고 일자: 2017. 2. 22. 심사 및 수정 일자: 2017. 3. 15. 게재 확정 일자: 2017. 3. 22.

* 한국경제학회장직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덕분이었다. 큰 잘못 없이 회장직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 때문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특별히 스승이신 서강대 김병주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불초한 제자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다. 이승훈 가스공사사장은 후배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고자 늘 노심초사하신다. 이번에도 그러셨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님은 후배라고 이광구 우리은행장님은 동문이라고 민폐를 불평하지 않고 도와주셨다. 서강출신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성의를 다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성대영 위더스 회장님, 홍성렬 마리오 회장님, 구자관 삼구아이엔씨 대표님께 참으로 감사한다. 지면 제약 때문에 한 분 한 분 거명하지 못하지만 이분들 이외에도 기관회원으로 학회의 지원에 인색하지 않으신 여러 기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학회의 박선화 실장, 김도영 사무국장, 사무차장들 그리고 학회의 사업에 관계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서강대학교 남주하 교수께 감사한다. 무능한 선배가 학회장을 맡을 때마다 모금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은 일에 헌신해 준데 대하여 감사할 방법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익명의 두 심사위원과 자문위원의 유익한 평에 감사한다. 이 논문의 정리되지 못한 잘못은 당연히 저자의 몫이다.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choj@sogang.ac.kr

I. 들어가며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상처는 아직도 상당부분 치유되지 않고 있다. 식민지 지배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는 같은 사안을 보는 눈이 다르고 각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위안부 문제만하더라도 일본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아직 해결할 사안이 남아 있다고 본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이념이 아닐까 한다. 특히 민족주의적인 입장이 강한 사람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객관적인 처신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아무리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해도 민족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지배를 평가하는 작업은 단순한 것이 아닐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그와 같은 지배가 피지배 민족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항구적인 상처를 남긴다. 다시 말해 역사는 일회적(一回的)이기 때문에 식민지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든 설명되지 못하는 잔차가 남는다. 스스로 경영해보지 못한, 실현되지 못한 또 다른 역사가 유령처럼 떠도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역사의 잔차가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되는 부분보다 더 커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일회성은 식민지 지배를 평가할 때 항상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할 칼인지도 모른다.

일회성과 함께 역사를 읽는데 중요한 것은 축시성(逐時性)이다. 즉 역사는 시간을 따라 일어나는 사건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선행하는 역사가 후행하는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후행하는 역사가 선행하는 역사를 이어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기도 한다. 역사의 축시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다. 역사의 경로의존성은 역사를 규정하는데 가장 그럴 듯한 용어이지만 가장 무책임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선행하는 역사로 후행하는 역사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자주, 무책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은 역사마다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역사의 연구는 필연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에 따른 연속성과 단절성을 바르게 읽어낼 때에만 경로의존성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제국주의 식민지기 경제적 성취에 대한 평가는 연구하는 사람이 어느 측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르다. 첫째, 수탈론이 있다. 긴 수탈론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학자로 신용하(2006)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정책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정책과 마찬가지로 한국민족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수탈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정책과 달리 한국민족을 지구상에서 영구히 소멸시켜 버리려는 ‘한국민족 말살정책’을 강행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정책은 각종의 잔악한 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것이었다.”(신용하, 2006, p. 58)

수탈론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민족을 전체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의 여러 측면이 서로 다른 속도와 양태로 진화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¹⁾ 오늘날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이와 같은 견해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식민지기에 경제발전이 있었다는 견해들이 있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이들의 주장에서 주목되는 점은 식민지기의 여러 자료를 정리한 결과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견해의 하나로 식민지기에 경제발전과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다.²⁾ 이는 安秉直 등(1990), 安秉直·中村哲(1993), 안병직(2001), 박섭 등(2004), 이대근(2005), 김낙년(2012)이 편찬한 저서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저자들 그리고 이영훈(2016b)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영훈은 식민지기 경제발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그럼에도 1인당 소득수준이나 종합적인 생활수준은 악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다고 함이 실태에 가깝다. 인구증가의 속도 이상으로 소득증가의 속도가 빨랐던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와 일본으로의 수출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일본 측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 간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사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이영훈, 2016b, pp. 259-260)

셋째, 식민지기의 경제발전에는 동의하지만 그와 같은 발전의 혜택이 한국인에게

1) 그런 의미에서 수탈론은 역사의 일회성의 의미를 극단으로 추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역사의 축시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돌아간 것이 많지 않다는 허수열(2005)의 “개발 없는 개발”의 견해가 있다. 허수열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³⁾

“일제시대에 조선이 개발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개발의 측면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조선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었는가를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조선은 개발되었지만 조선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즉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허수열, 2005, p.13)

넷째, 보다 적극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으로는 식민지기에 경제적으로 근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발전이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한국의 경제발전을 인과(因果) 했다는 견해가 있다.⁴⁾ 이와 같은 견해를 가장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학자는 아마도 차명수(2001, 2014)일 것이다.

“... 식민지조선과 한국의 경제 성장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끈으로 이어져 있으며,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연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한 연결이다. ... 식민지기에 사망률이 꾸준히 떨어지고 초등 교육이 확산되었다. 식민지기를 통해 더욱 건강해지고 유식해진 노동자들은 해방 후에도 해방 전과 다름없이 공장과 농토에서 생산 활동을 수행했다.”(차명수, 2014, p.412)

이와 같은 견해, 곧 식민지기의 경제발전이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고도성장을 인과(因果) 하였다는 견해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학자들은 많다. 아마도 처음 그와 같은 견해를 약간은 우회적으로 피력한 학자는 Eckert(1991)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저서 마지막 두 문장은 그의 견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To be sure, the colonial legacy would not be the sole factor in the modeling of the South Korean political economy after 1948. Nevertheless, in looking at the recent transformation of that country, especially during the

3) 역사의 일회성이 갖는 의미를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4) 역사의 축시성과 경로의존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crucial two decades of rapid industrialization under Park Chung Hee, it is difficult for the colonial scholar to shake off an uncanny feeling of déjà vu, a sense that history not only prevailed, as one might expect, but that it prevailed with a vengeance.”(Eckert, 1991, p. 259)

이와 같이 식민지 경제의 성과가 어떠하였고 20세기 후반 한국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견해는 다양하다. 먼저 식민지기에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은 데이터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낙성대경제연구소에 많은 통계자료가 정리되어 있다.⁵⁾ 이 논문은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식민지 근대화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식민지기의 경제발전이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고도성장을 인과(因果) 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정리된 데이터에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이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인과하였다는 증거가 있는가를 뒤져보겠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절에서는 식민지기와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발전에 관하여 알아본다. 제Ⅲ절에서는 해방과 함께 일본이 남기고 간 물적, 인적, 정부, 제도적 유산이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고도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제Ⅳ절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식민지기와 20세기 후반의 경제성장

1. 식민지기의 경제성장

일제 식민지기 경제성장이 <Figure 1>에 나타나 있다. 먼저 <Figure 1>(a)에는 식민지기 남한과 북한의 1인당 GDP가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1925년경까지는 남한과 북한이 비슷한 정도의 성장을 보인다. 그러나 1926년을 시작으로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의 그것을 추월하고 1940년에는 33% 가량 더 높다. 이것은 천연 자원이 북한에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기 위한 대형 공업시설이 1926년경부터 북한에 집중 투자된 결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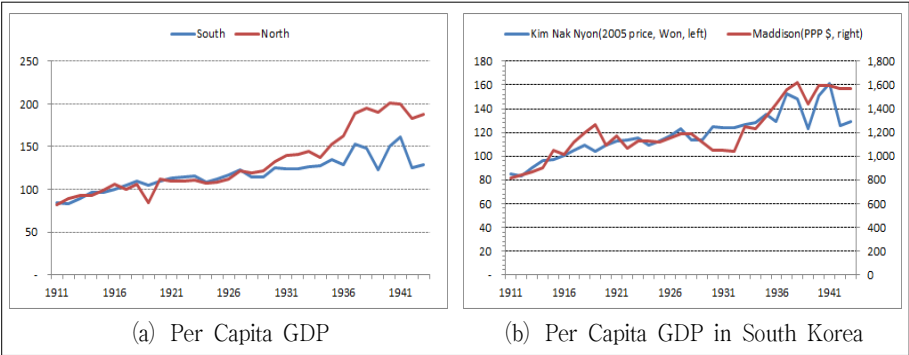
1911년부터 1943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남한의 경우

5) www.naksung.re.kr/xs/sd_index.

1.31%, 북한의 경우 2.62%였다.⁶⁾ 그리고 2005년 화폐가치로 나타낸 2011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85만원, 82만원이었고 1943년에는 각각 129만원과 188만원이었다. 따라서 32년 동안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각각 52%, 129% 증가하였다.⁷⁾

이와 같은 숫자를 서유럽과 신세계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11년과 1943년 사이 12개 서유럽 국가⁸⁾의 1인당 국내총생산의 연평균증가율은 1.03%로 실질가치는 39% 증가하였다.⁹⁾ 그리고 같은 기간 신대륙 4개국¹⁰⁾의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의 연평균증가율은 2.49%이고 실질가치는 120% 증가하였다. 즉 식민지기 남한의 경제성장은 서유럽 12개국의 평균보다는 빨랐지만 신대륙 4개국보다는 느렸음을 알 수 있다. Maddison의 추정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세계경제는 매년 평균 0.93%로 성장하였다.

〈Figure 1〉 Economic Growth in Colonial South and North Korea



Source: (a)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ww.naksung.re.kr/xs/sd_index,
(b)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Maddison project, <http://www.ggdc.net/maddison/maddison-project/home.htm>, 2013 version.

6) 1911년부터 식민지기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았던 1941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2.01%, 3.12%였다.

7) 식민지기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가장 높았던 1941년의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각각 161만원, 201만원이었다. 따라서 1911년부터 1941년까지 30년 동안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각각 90%, 143% 증가하였다.

8) 12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중북부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다.

9) 자료는 〈Figure 1〉의 각주에 나타나 있는 Maddison project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0) 신대륙 4개국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이다.

〈Figure 1〉(b)는 김낙년¹¹⁾과 Angus Maddison의 식민지기 남한의 성장률을 비교하고 있다. 〈Figure 1〉(b)에서 Maddison은 그의 원추정치에 따른 성장률이고 김낙년은 Maddison의 초기값¹²⁾에 김낙년의 성장률을 적용하여 구한 시계열이다. 이에 따르면 Maddison의 추정치에서는 1930년대 매우 빠른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낙년의 추정치에 따르면 그와 같은 빠른 성장이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

〈Figure 2〉(a)에는 김낙년이 추정한 남한의 1인당 GDP와 당시 세계경제의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1인당 GDP대비 남한의 1인당 GDP의 비율이 나타나 있다.¹³⁾ 이에 따르면 식민지기 남한의 1인당 GDP는 연평균 1.31%로 증가하지만 선도국인 미국의 1인당 GDP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즉 신고전과 경제성장이론이 함의하는 따라잡기(catch-up)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30년대 초반 미국에 심각한 공황이 발생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그 깊이가 미국만큼 깊지 않았던 일본과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따라잡기가 일어나는 듯 보였지만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따라잡기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¹⁴⁾

식민지기 한국경제의 성장의 두드러진 특성은 변동성이라 할 수 있다. 〈Figure 2〉(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장률이 수시로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은 당시가 대공황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한국경제가 1인당 소득으로 보나 전체로 보나 작은 규모였는데 식민지 지배와 만주사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과 같은 큰 충격이 끊이지 않고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매우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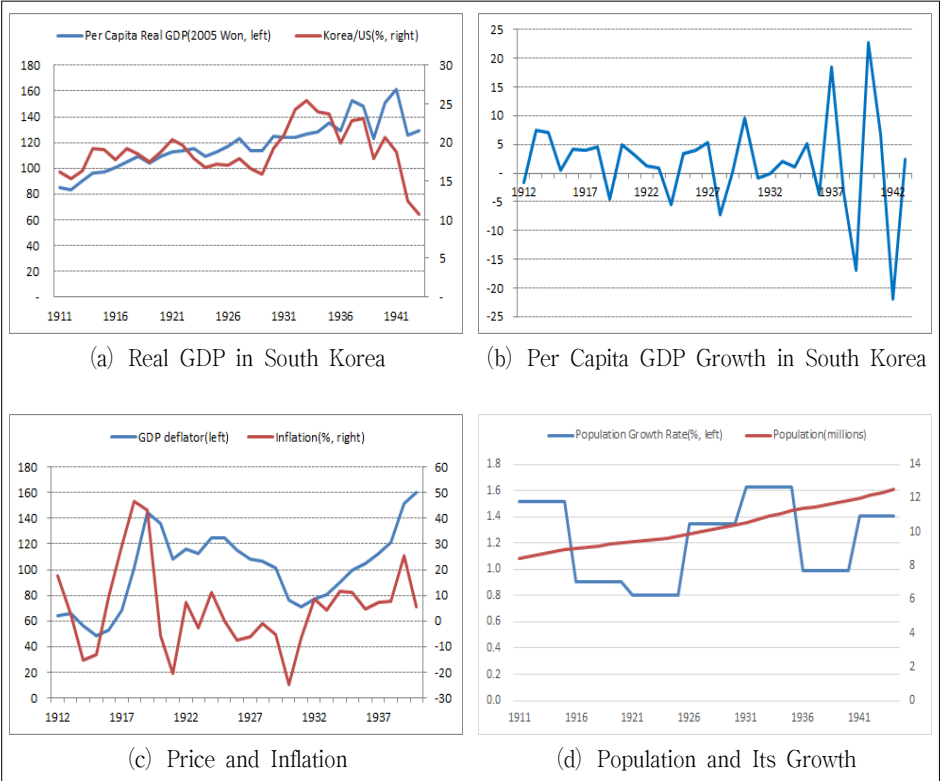
11) 김낙년(2012)과 낙성대경제연구소의 홈페이지(www.nalsung.re.kr/xe/sd_index)의 데이터를 참조할 것.

12) 1911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

13) 연구에 따라 따라잡기의 대상은 다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따라잡기 연구는 당시의 세계경제 선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를 모두 제치고 선도국으로 올라선 것은 1900년경이다.

14) Maddison의 데이터에 따르면 공황기에 일시적인 미국의 1인당 GDP 따라잡기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20세기 전반까지 세계선도국 따라잡기는 19세기 후반 미국과 호주, 아르헨티나 등에서 당시의 세계선도국 영국 따라잡기가 일어났고 20세기 전반에는 스웨덴에서 미국 따라잡기가 일어난다.

〈Figure 2〉 Economic Growth in Colonial Korea



Source: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Figure 2〉(c)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변동성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극심하였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물가가 하락하는 기간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물가가 하락한 해는 11개이고 20% 이상 하락한 해가 두 번이다. 그리고 40% 이상 상승한 해가 두 번, 20% 이상 상승한 해가 네 번이다.

〈Figure 2〉(d)에 나타나 있는 추정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⁵⁾ 1910년 한국의 인구는 16,759,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한의 인구가 11,109,000명, 북한의 인구가 5,650,000명이었다. 1944년 한국의 추정인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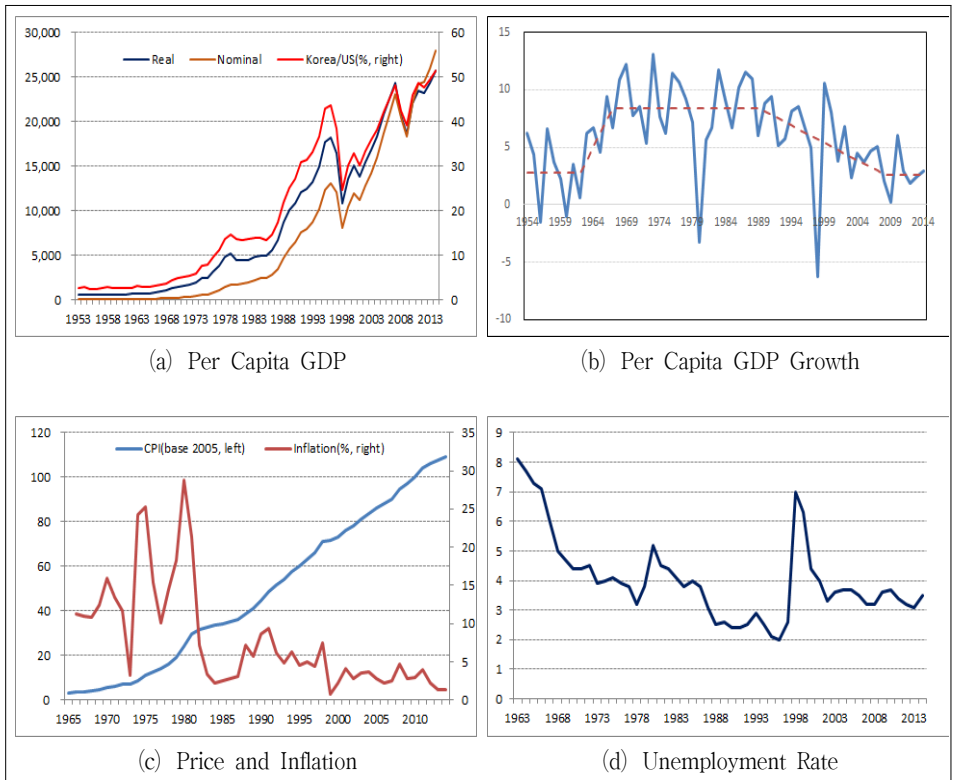
15) 인구추정치에 관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특히 1910년대 초의 인구에 관한 논쟁이 뜨거운데 이는 식민지기 1인당 소득의 성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에 관하여는 허수열(2005)을 참조할 수 있다.

25,900,000명이었고 남한 인구가 16,346,000명, 북한 인구가 9,554,000명이었다. 한국의 인구는 34년 동안 연평균 1.29%로 증가한 셈이고 남한과 북한의 인구는 각각 매해 평균 1.14%, 1.56%씩 증가한 셈이다.

2. 한국의 고도성장¹⁶⁾

앞에서 식민지기에 경제성장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식민지기의 성장과 1960년 중반 이후의 성장은 얼마나 유사할까? 이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20세기 후반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3〉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after Korean War



Source: Bank of Korea, Statistics Korea, FRED Database(The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16) 이 소절은 Cho (2015)에 기초하고 있다.

〈Figure 3〉(a)에는 한국전쟁 종전 직후인 1953년 이후 미화로 나타낸 한국의 1인당 명목 및 실질 GDP와 미국의 1인당 대비 한국의 1인당 GDP의 비율이 퍼센트로 나타나 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미화 66달러였으며 이는 미국 1인당 GDP(2,433달러)의 2.7%였다. 십 년 뒤인 196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미화 90달러였으며 이는 미국 1인당 GDP의 2.8%로 십 년 동안 세계경제의 선도국인 미국에 대한 따라잡기(catch-up)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인당 GDP에 있어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한 것은 1966년경부터이다. 1966년 한국의 1인당 GDP는 미화 128달러로 미국 1인당 GDP(\$4,147)의 3.1%였다. 그리고 미국 1인당 GDP의 10%를 초과한 것은 1977년이다. 미국의 GDP 대비 한국의 1인당 GDP는 1978년과 1985년 사이 8년 간 평균 13.8%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 이후 1996년까지 따라잡기가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 즉 1986년 이후 다시 한국의 따라잡기가 시작되어 1986년 미국의 14.7%이던 한국의 1인당 GDP가 1996년에는 43.7%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1986년 이후 1996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의 미국의 1인당 GDP에 대한 비율은 매년 평균 10% 정도씩 증가하였다.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에 많은 희생을 강요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인 1996년에 비해 1998년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 1인당 GDP에 비해 19.1% 포인트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1997년 2.7%에서 1998년 7.0%로 증가하였다(〈Figure 3〉(d) 참조). 그러나 1999년 이후 한국경제는 빠르게 회복하였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위기로 촉발된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도 한국경제의 따라잡기를 멈추게 할 수 없었으며 201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미화 27,963달러로 미국 1인당 GDP(\$54,370)의 51.4%였다.

6.25전쟁의 종전 이후 한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이 〈Figure 3〉(b)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6.25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5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처음 단계는 1962년까지 지속된 장기침체기(long term stagnation)이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전쟁 중에 파괴된 뒤였으며 전쟁 이후의 혼란, 정치적 후진성, 기술 부족, 자연자원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의 한국경제는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경제부흥을 도모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던 시기였다. 1957년 1인당 GDP 증가율이 6.6%에

달했던 적이 있지만 1954년과 1962년 사이 1인당 실질GDP의 평균성장률은 2.8%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낮은 성장률로는 미국경제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두 번째 발전단계는 1963년부터 1968년 사이로 낮은 경제성장으로부터 높은 고도성장으로의 이행단계이다.¹⁷⁾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이 가속화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같은 해에 울산에 공업단지가 세워지고 화폐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외국 자본재의 도입을 위해 외환관리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었다. 외국 자본재와 원자재 구입을 위한 국제통화의 확보가 절실하였기 때문에 경제의 문호가 외국에 개방되고 무역을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의 산업화가 국가정책의 최우선이었고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은 생산시설의 건설에 투입되었다. 서울과 부산 사이의 고속도로가 1968년 2월에 착공되었으며 1970년 7월에 개통되었다. 그 사이 한국의 1인당 GDP증가율은 1963년 6.3%에서 1968년 10.9%로 증가하였다. 한국경제의 기적을 위한 가속도는 이 시기에 불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1인당 GDP 대비 한국 1인당 GDP의 비율은 1969년 4.3%에서 1989년 25.1%로 증가하였다. 세계경제의 선도국인 미국 따라잡기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빠르게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두 기간에 모두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매우 달랐다. 먼저 1970년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두 차례의 유가파동(oil shocks) 때문에 유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한국의 수입 가운데 반 이상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한국은 필연적으로 국제수지에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도 혼란기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치는 많은 저항을 불러왔고 끝내는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의 시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외적인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볼커(Paul A. Volker, Jr.)에 의한 脫인플레이션(disinflation) 정책에 따른 미국의 불황 때문에 1980년대 초 적지 않은 시련이 있었지만 한국의 1인당 GDP증가율은 1969

17) 잘 알려진 바와 같이 Rostow(1960)는 이를 도약단계(take-off stage)라고 부르고 있다.

년부터 1989년까지 평균 8.4%로 매우 높게 유지되었다. 더욱이 <Figure 3> (b)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성장률은 이 기간 동안 높게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추세도 나타나지 않았다.¹⁸⁾ 이 기간을 한국경제발전의 고도성장기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1980년대는 한국경제가 여러 면에서 안정화를 이룬 시기이다.¹⁹⁾ 첫째로, 198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시기이다. <Figure 3> (c)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9년에서 1981년 사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16.5%에 달하였다.²⁰⁾ 그러나 1982년 이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 아래로 유지되었다. 둘째, 1980년대는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크게 감소한 시기이다.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1981년 83.9%이던 것이 1990년에는 59.3%로 감소하였다. 셋째, 1980년대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1987년과 1988년 경상수지 흑자는 각각 GDP의 8.2%, 8.7%에 달하였다. 넷째, 1980년대는 한국경제의 산업생산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무게가 이동한 시기이다. 다섯째, 1980년대는 한국의 실업률이 처음으로 3% 아래로 떨어진 시기이다(<Figure 3> (d) 참조). 3% 미만의 실업률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간 지속되었다.

한국경제발전의 4단계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끝난 1989년경부터 2008년경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새로운 저성장 장기경로로의 수렴경로를 따랐으며(<Figure 3> (b) 참조) 1인당 잠재GDP는 매년 0.305% 포인트씩 감소하였다. 1990년 이후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한국경제는 개방화를 서둘렀다. 금융산업은 자유화되었고 많은 규제가 철폐되었다. 특히 은행여신과 이자율이 자유화되었으며 외국인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었다. 1997년 12월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이하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외환관리의 부실과 지나치게 빠른 금융산업의 자유화가 꼽힌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한국경제는 매우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부실한 기업이 정리되고 은행을 포함한 많은 금융기업이 도산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99년 이후 매우 빠르게 회복하였다.

18) 한국과 같은 경제성장의 패턴은 20세기 후반 도약하는 많은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하여도 뒤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9) 한국은행 (2005) 참조.

20)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은 18.9%로 더욱 높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한 시기이다. 그에 더하여 통화증가율도 평균 32.5%에 달하였다. <Figure 1> (c)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물가의 변동성도 1980년대에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경제 발전의 5단계는 2008년 이후 나타난 장기저성장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한국의 1인당 잠재GDP 증가율은 평균 2.6%였다. 한국이 현재 장기 저성장의 정상상태(steady state)에 이미 진입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더 낮은 저성장경로로 수렴하고 있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장기 저성장경로의 근처에 와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3. 식민지기 경제성장의 평가

식민지기에 경제성장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식민지기 남한의 경제성장은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GDP로 볼 때 평균 1.3~2.0% 정도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았다. 1954년부터 1962년 사이 1인당 GDP 평균성장률은 2.8%였고 2008년과 2014년 사이의 평균성장률은 2.6%였다. 그리고 이 두 기간의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성장률이 추세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선도국에 대한 따라잡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식민지기 경제성장과 1953~1962년 사이의 경제성장은 유사하다. 그러나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이 1960년대 중반이후의 경제성장과 유사하다는 주장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두 기간 경제성장의 패턴은 성장률의 시계열 패턴이나 세계경제 선도국 따라잡기에 있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또한 분명한 것은 식민지기와 1953~1962년 사이의 경제성장을 우리가 성장이론의 전범이라고 배운 Robert M. Solow(1956, 1957)의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의 모형이 산업화가 완성되었거나 기술의 최첨단에 있는 경제를 설명하는 모형이지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크고 완전고용에서 아래로 멀리 있는 경제의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솔로모형에 따르면 식민지거나 1950년대와 같이 자본이 희소한 경우 성장률이 매우 높아야만 한다. 그리고 점차 저성장으로 수렴하여야만 한다. 소위 캐치업(따라잡기)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패턴이 식민지거나 1950년대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기간에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아직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기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데이터로부터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성장의 발견에 놀라 그에 집착하는 나머지 식민지기 경제성장에 대한 지나친 주장이 적지 않고 그와 같은 성장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데이터의 천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지금 식민지 근대화론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발견된 사실들을 하나로 묶는 이론을 찾거나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론이 없이 필요에 따라 일면적인 사실들에 근거한 주장들만 제시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초래되고 역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식민지기에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혹은 근대화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의견은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3~1962년 사이의 경제성장은 성장률로만 보면 식민지기보다 높다. 그러나 이 기간의 경제성장을 대단한 것으로 평가하는 학자는 없는 것 같다. 성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대중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성장이었다. 후진국의 성장이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그렇다. Parente and Prescott (2000)이 보고하고 있듯이 세계의 최빈국에서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빈국과 선도국의 격차가 유지되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Ⅲ. 식민지기의 유산과 고도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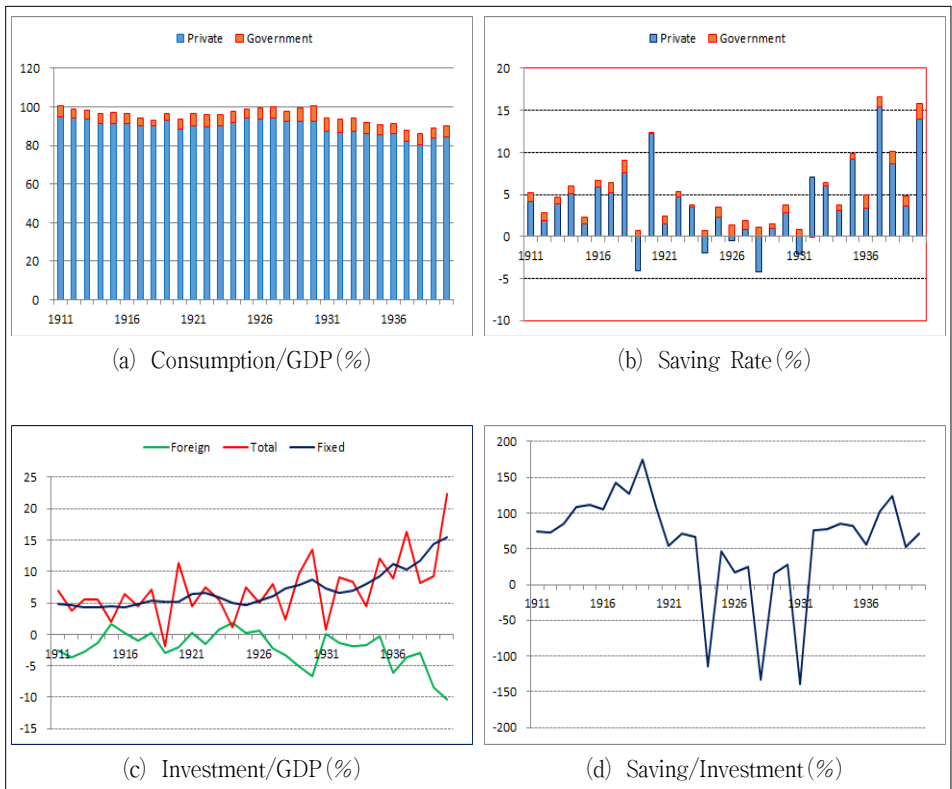
식민지기 경제발전이 196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주장에는 네 가지 정도의 근거가 제시되곤 한다. 첫째, 식민지기 공업화와 자본축적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고 패전 이후 일본이 남기고 간 그와 같은 물적 자본이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식민지 경영 특히 공업화와 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적 자본이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셋째, 식민지기 강한 정부가 박정희의 강한 정부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식민지 지배가 강한 정부를 통해 고도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넷째, 식민지 시대 이식한 근대 제도가 고도성장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1. 식민지기의 공업화와 자본축적

식민지기 소비와 저축, 투자가 <Figure 4>에 나타나 있다. 먼저 <Figure 4>(a)

에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이 나타나 있는데 이에 는 다음과 같은 특 징이 있다. 첫째, 식민지기(민간 및 정부) 소비의 비중²¹⁾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 지만 식민지기 내내 높게 유지되었다. 소비비중이 90% 아래로 떨어진 것은 30년 가운데 여섯 해이고 나머지 스무 여섯 해에는 90% 이상이였다. 그리고 소비비중의 감소는 1932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둘째, 식민지기 내내 정부소비는 국내총생산 의 8% 아래로 유지되었으며 보통은 5 내지 6% 정도였다. 셋째, 민간소비는 보통 국내총생산의 80%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며 97.3%까지 높아진 해가 있었다. 민간 소비비중은 1932년부터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80%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1937년과 1940년 두 해뿐이다.

(Figure 4) Consumption, Saving, and Investment



Source: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21) 이를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APC)이라 불리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정부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식민지기 저축이 <Figure 4> (b)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1911년부터 1940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저축률은 4.97%였다. 이 가운데 민간저축이 4.04%이고 정부저축이 0.93%이었다. 저축률이 10%를 상회한 해가 네 번이고 5%를 하회한 해가 열여섯 번이다. 그리고 나머지 해에는 저축률이 대체로 5~10% 사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다섯 해의 저축률은 마이너스라는 점이다.

투자율이 <Figure 4> (c)에 나타나 있다. 투자율은 1924년까지 연평균 5.0%에서 정체하였다가 1925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빠르게 증가하였다. 고정투자는 총투자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지만 훨씬 평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해외투자는 대부분의 해에 마이너스로 외국의 자본, 특히 일본의 자본이 유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1927년 이후에는 1931년을 제외하면 해외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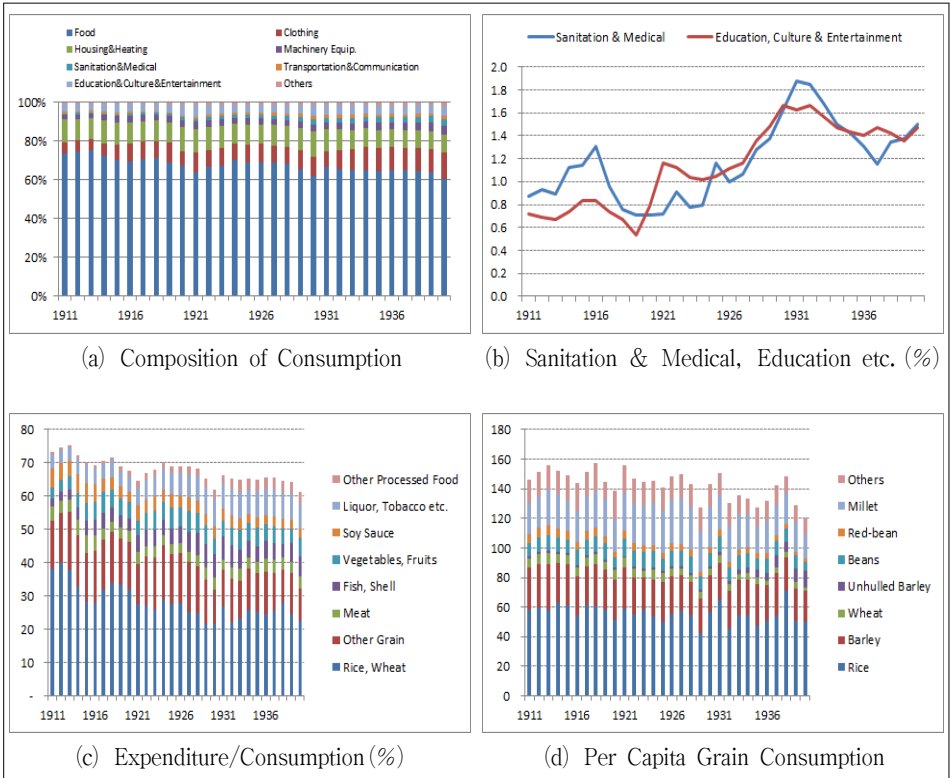
<Figure 4> (d)에는 투자재원자립도가 나타나 있다. 식민지기 투자재원자립도가 100%를 상회한 해는 1914~1920년, 1937~1938년 등 아홉 번이고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투자재원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심지어 1924, 1928, 1931년에는 마이너스였다. 투자재원자립도의 평균은 59.1%로 투자의 40% 이상이 외국자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 소비의 구성

소비의 품목별 구성비가 <Figure 5> (a)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1911년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계소비지출의 73%였다.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1940년에는 61%까지 하락하였다. 가계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의복비와 주거비였다. 의복비는 1934년까지 두 번째의 비중이었고 1935년 이후에는 주거비가 두 번째였다. 그리고 이 세 품목의 비중은 1911년에 91%이고 1940년에 84%였다. 특히 주목되는 항목은 보건·의료와 교육·문화·오락인데(<Figure 5> (b))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가 1930~1932년으로 전체 소비의 1.6~1.8% 정도였다.²²⁾

22) 이 항목들은 인적 자본형성의 핵심이다.

〈Figure 5〉 Composition of Consum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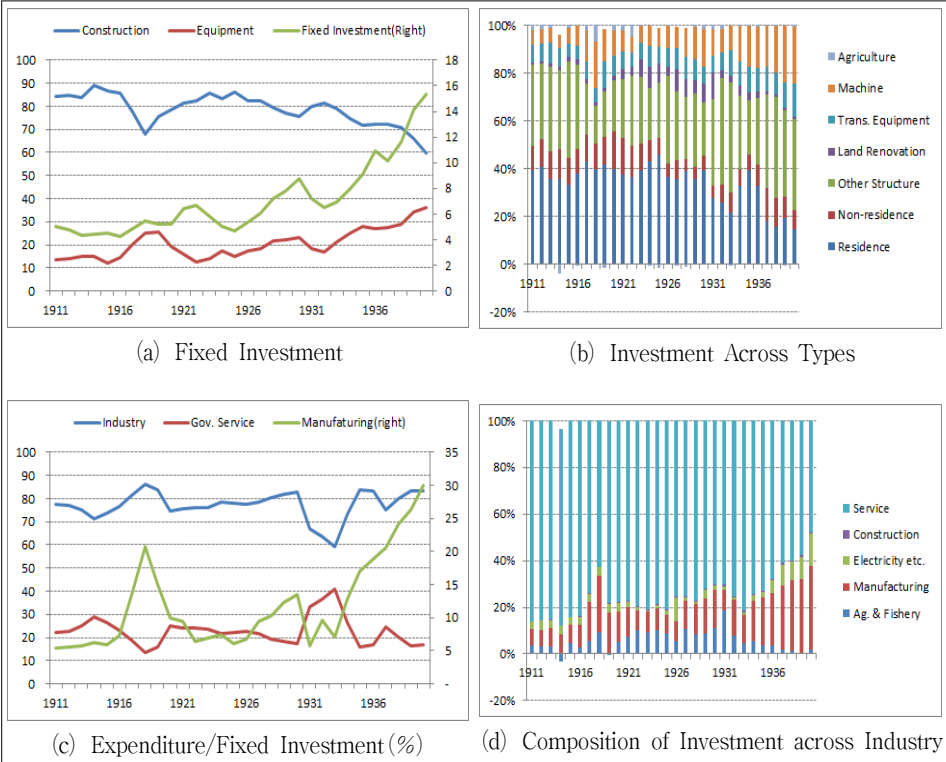
Source: ibid.

〈Figure 5〉(c)에는 식료품별 지출비중추이가 나타나 있다. 가계소비지출에서 미 맥류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1년 38%, 1940년 23%였다. 그리고 기타 곡류, 육류, 어패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11년 14%, 4%, 2%였고 1940년에 10%, 4%, 6%였다. 즉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곡류의 비중은 감소하고 육류와 어패류의 소비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주류와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의 소비도 1911년 5%에서 1939년 8%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Figure 5〉(d)에는 1인당 곡물소비량이 나타나 있다. 쌀의 1년간 소비량은 1911년에 58.2승(104.95리터), 1940년에 49.7승(89.57리터)이었다. 그리고 보리, 밀, 겔보리, 콩의 소비량은 각각 1911년에 28.3(51.06), 6.6(11.85), 1.6(2.84), 8.7(15.78) 승(리터)이었고, 1940년에 21.7(39.17), 2.2(4.01), 10.9(19.72), 6.1(10.95) 승(리터)이었다. 1인당 전체 곡물소비량은 1911년

146.3승(263.82리터), 1940년 120.4승(217.17리터) 이었다. 전반적으로 곡물소비량은 감소한 가운데 궤보리 소비량만 6.8배 정도 증가하였다.

〈Figure 6〉 Composition of Investment



Source: ibid.

(2) 투자의 구성

투자의 구성이 〈Figure 6〉에 나타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총생산에 대한 총투자의 비율은 1930년대 초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 GDP의 15%까지 빠르게 증가한다. 그리고 〈Figure 6〉(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같은 시기에 건설투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설비투자의 비중은 증가한다. 1930년대 초반은 만주사변을 비롯하여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던 시기로 한국의 병참기지화가 시작된 시기였다. 그런데 당시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설투자에서 높고 설비투자에서 낮은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투자는 다시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기타건축물, 토지개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Figure 6> (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0년대 초반까지 80% 정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1940년까지 60% 정도까지 감소한다. 그리고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기계류, 낙농·축산 투자인데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0년대 초반 20% 정도에서 1940년 36.2%로 증가한다. 특히 기계류에 대한 투자비중은 193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Figure 6> (c)에는 산업투자, 정부서비스투자 그리고 광공업투자의 비중이 나타나 있다. 산업과 정부서비스투자가 전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대 20% 정도이다. 그리고 광공업투자는 1910년대 후반 3년, 1920년대 후반 3년을 제외한 기간에 전체 고정투자의 5~6%를 유지하다가 1934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Figure 6> (d)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업별 고정자본형성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서비스산업의 전산업 대비 비중이 70%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35년이며 그 즈음 전산업 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광공업의 비중이 2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광공업과 함께 전기·가스·수도에 대한 투자비중도 증가하기 시작한다. 주목할 것은 서비스 부문 고정자본형성 가운데 30% 정도는 정부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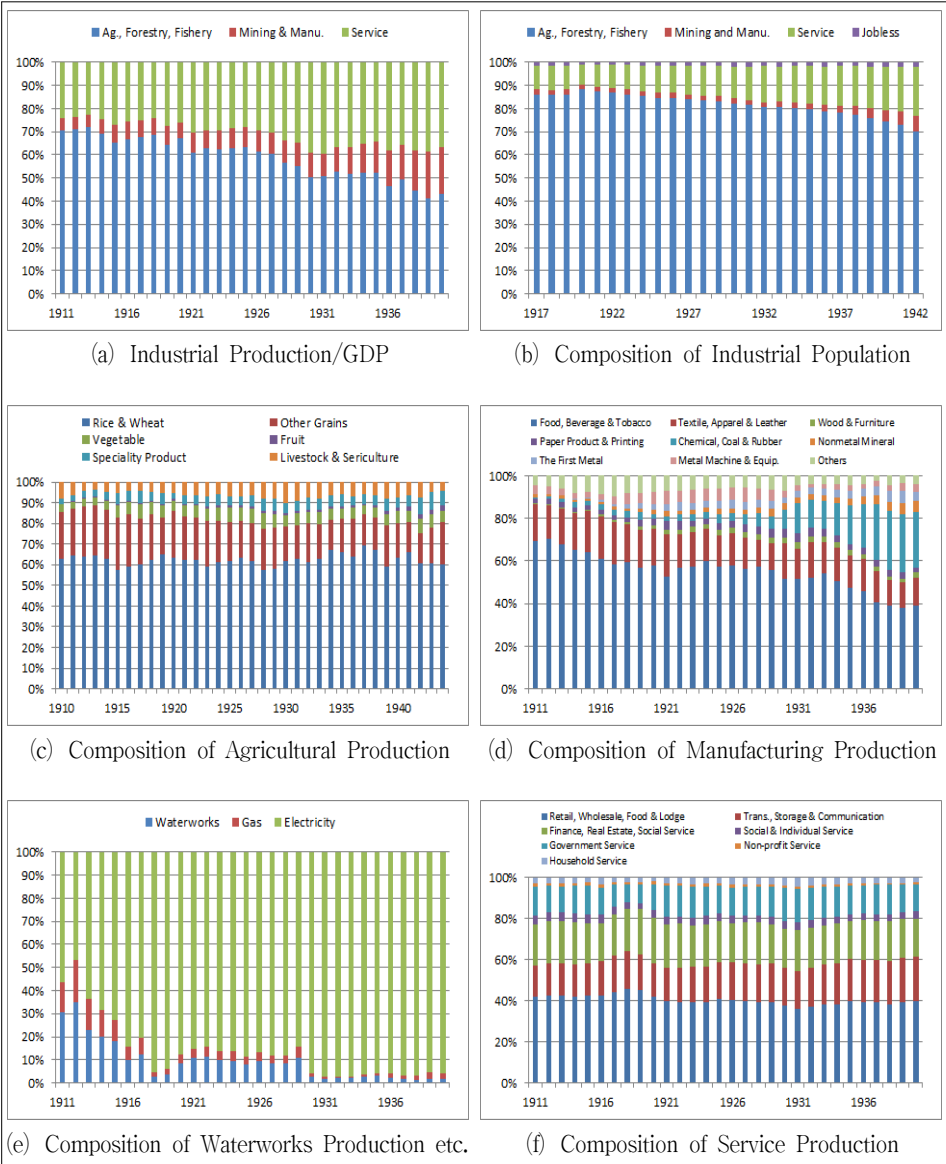
(3) 식민지기 산업구조

식민지기 산업분포가 <Figure 7>에 나타나 있다. 생산액으로 볼 때 식민지기의 주된 산업은 역시 농림어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림어업의 생산비중은 감소하지만 1935년까지 GDP의 50% 이상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1940년에는 43%까지 하락하였다. 반면에 광공업의 생산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1928년 처음 GDP의 10%를 상회한 다음 1939년에는 20%를 넘어섰다. 전기·가스·수도업 및 건설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GDP대비 생산액이 1911년 24%에서 1940년 37%까지 증가하였다.

산업별 인구를 보면 역시 농림어업인구가 가장 많다. 구성비로 보면 1917년 86.2%이던 것이 1940년 74.4%로 감소하였다. 감소한 농업인구는 광공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으며 특히 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1917년 인구비중은 각각 2.2, 10%이었으며 1940년에는 4.7, 19.0%였다.

즉 1940년까지 농업부문에서 이탈한 인구의 비중은 11.7%였으며 그 가운데 21.7%는 광공업으로, 76.2%는 서비스업으로 나머지 2.2%는 무직으로 이동하였다.

〈Figure 7〉 Industrial Structure



Source: ibid.

각각 산업에서 부가가치 구성비가 <Figure 7> (c)~(f)에 나타나 있다. <Figure 7> (c)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업생산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품목은 역시 미맥류로 6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식민지기에 감소하지 않았다. 다음이 기타곡물로 20% 정도로 미맥을 포함한 곡류가 80%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품목이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Figure 7> (d)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부가가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료와 연초로 1911년에 75.8%이었으나 1940년에는 39.7%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섬유·의복·가죽 제품은 1911년에 부가가치 비중이 19.1%이었으나 1940년에는 13.1%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음식료와 연초, 섬유·의복·가죽 제품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에 화학·석탄·고무의 비중은 1911년 0.6%에서 1940년 26.5%로 증가하였다. 특히 1930년 조선질소비료공장이 준공된 이후에는 1930년 8.7%에서 1931년 13.3%로 부가가치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금속제품·기계·장비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처음 증가하다가 1927년경부터 감소하여 1940년에는 오히려 1911년의 아래로 하락하였다.

수도·가스·전기업의 부가가치에서는 <Figure 7> (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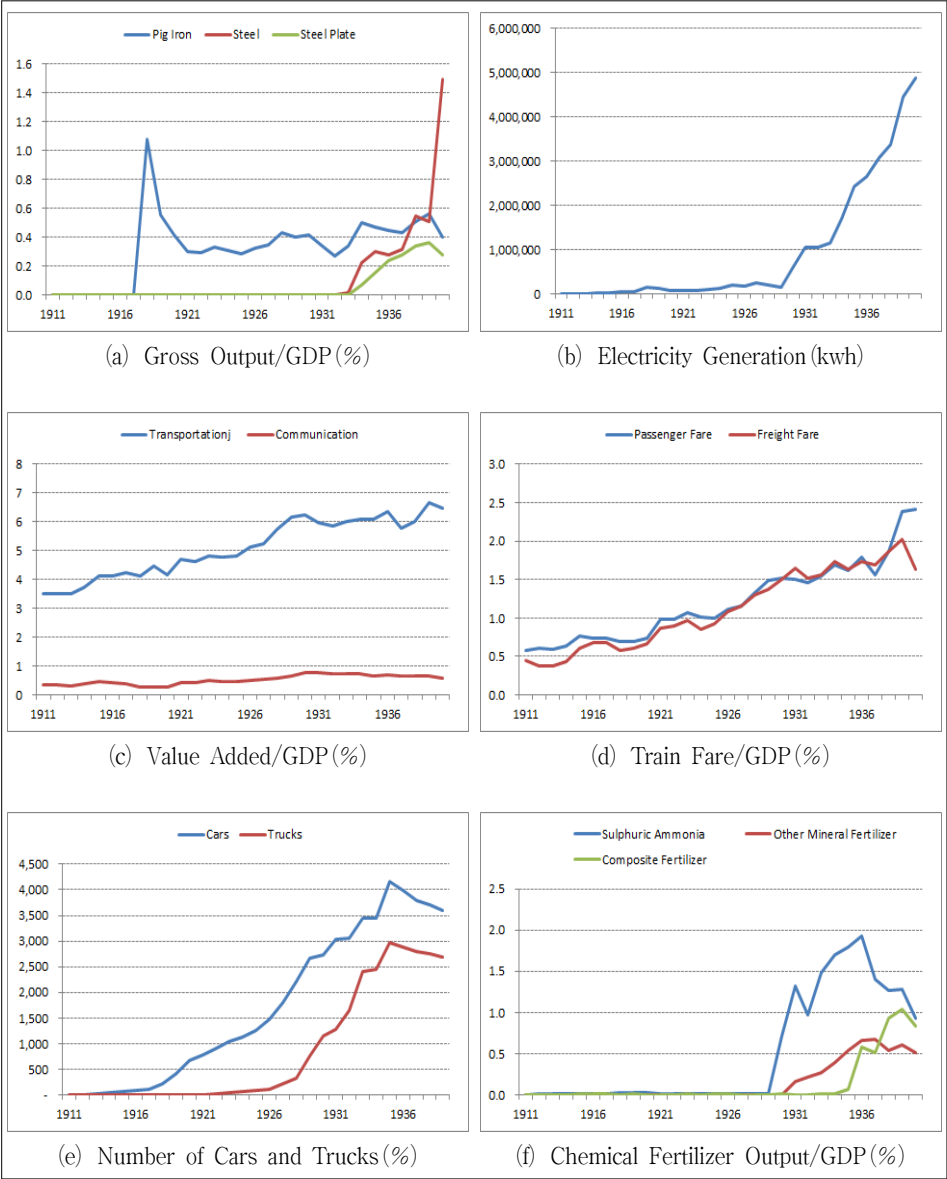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Figure 7> (f)에 나타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비중이 약 40% 정도, 운수·창고·통신업의 비중이 20% 정도로 이 두 업종을 합하면 60% 가까이 된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서비스로 10% 중반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의 부가가치비중은 식민지기에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Figure 8>에는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들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Figure 8> (a)에는 철강생산량의 GDP대비 비중이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식민지기 철강의 생산은 무시할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력생산은 1929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는 1929년에 완공된 부전강수력발전(20만kw) 때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에는 수자원이 풍부한 데다 지형적으로 산악지대가 많아 수력발전에 매우 유리한 자연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부전강수력에 이어 1935년에 장진강수력(33.4만kw), 1940년 허천강수력(35.5만kw), 1941년 압록강 수풍수력(73.5만kw)이 전력생산을 시작하였다. 풍부

한 전력자원은 흥남에 당시 동양 제일의 황산암모늄 비료회사인 조선질소비료주식 회사가 세워진 주된 이유이다. 남한에서도 수력발전소가 세워지기는 하였으나 북한에 비하여 비교할 만 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Figure 8〉 Some Industrial Indices



Source: ibid.

GDP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Figure 8> (c)에 나타나 있다. 먼저 운수업 부가가치의 비중은 1929년까지 증가하다가 6% 정도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통신업의 부가가치는 매우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Figure 8> (d)에는 철도의 여객운임과 화물운임의 비중을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기간에 여객과 화물운임이 대략 전체 운임의 50%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승용차와 화물차의 대수는 1935년까지 승용차는 4,000대 이상, 화물차는 3,000대 가까이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Figure 8> (f)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학비료의 사용은 193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에서 화학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라고 할 수 있다.

(4) 식민지기 소비와 투자, 그리고 물적 유산

앞의 여러 표에서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식민지기 특히 1930년대 이후 물적 자본의 투자가 적지 않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기의 물적 자산이 196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을 만큼 컸던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첫째, 식민지기의 소비와 저축, 투자를 보면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생활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Figur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식민지기에 민간소비는 전 기간에 GDP의 80%를 상회하였고 정부소비를 합하면 대부분의 식민지기에 90%를 상회하였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합이 100%에 근접한 경우도 여섯 번이나 된다. <Figure 5>에 나타나 있는 소비의 구성을 보면 식료품비가 61~74%, 의복이 6~14%로 이 둘을 합치면 전 식민지 기에서 소비의 75%를 상회한다. 그리고 교육·문화·오락의 비중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은 과연 한국이 식민지기에 빈곤의 함정 곧 맬서스의 함정(Malthusian trap)에서 탈출을 하기는 한 것이냐는 것이다.

둘째, 식민지기의 공업화는 과연 한국이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만큼 컸던 것일까? <Figure 4> (c)와 (d)에서 볼 수 있듯이 GDP대비 투자비율은 1920년대 후반까지 5% 정도였다. 그 이후 북한에 대형 발전소와 홍남에 질소비료공장이 건설되면서 투자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 중·후반에는 특히 전쟁특수로 인해 투자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투자재원자립도

는 191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 미만이었으며 1920년대 초반과 1930년대 초반 사이에는 50% 미만 그리고 1924, 1928, 1931년에는 심지어 마이너스였다. 결국 공업화는 해외자본 곧 일본의 자금이 유입되어 이룩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공업은 모두 일본인에 의해 경영되었다. 그리고 Eckert(1991)가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일한 한국인 대기업이었던 경성방직마저도 일본제품과 경쟁이 되는 제품의 생산을 하지 않도록 직·간접으로 억압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공업화가 과연 한국 대중의 생활수준을 생존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을까?

더욱이 거시경제의 맥락에서 볼 때 투자의 규모가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Figure 6> (a)에 나타나 있는 투자의 구성을 보면 건설투자가 1930년대 초반까지 전체 투자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며 설비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²³⁾ 다시 말해 공업화를 위한 설비투자는 1930년대 초반까지 GDP의 1%미만 이었고 1940년에 이르러서도 6% 미만이었다. 그리고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고정투자의 10%를 상회하는 것은 1928년 이후이다.

식민지기 산업구조 또한 변화한다. 특히 산업별 인구구성의 변화는 식민지기의 경제발전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1917년 농업인구의 비중은 86.2%였으며 1935년에야 80% 아래로 감소한다. 공업인구는 1936년까지 2%대였으며 그때까지 증가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공업인구가 3%를 초과한 것은 1937년으로 태평양전쟁이 끝나기 8년 전이었다. 서비스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업인구의 감소가 대부분 서비스 인구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쟁을 위한 군수산업을 위해 1937년 이후 공업인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 기간을 제외한 식민지기 대부분의 기간에 인구의 3% 미만을 고용하는 산업이 생활수준을 얼마만큼 개선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을까?

더욱이 이대근(1991, pp. 504-505)이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패전 후 일본이 남기고 간 “공업시설은 8.15⇒남북분단⇒미군정⇒한국정부로 이어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원상 그대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미군정기에 있어서 귀속공장의 파

23) 1940년 설비투자의 비중은 고정투자의 40% 정도이다.

괴, 위축상황을 식민지공업화의 유산을 단절시키는 제 1단계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후 한국정부에 이관된 귀속공장이 다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것의 단절을 가져오는 제 2단계가 전개된다.” 그리고 공업시설과 기계, 부품들은 미국제품으로 대체된다. 결국 식민지기 물질 자본이 한국의 고도성장에서 한 역할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2. 인적 자본의 축적

소비에서 차지하는 교육·문화·오락비 지출의 비중을 〈Figure 5〉(b)에서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문화·오락비의 비중은 1920년까지 가계소비의 1% 미만이었으나 1921년부터 1%대를 유지하였다. 교육·문화·오락비의 비중이 가장 컸던 해는 1932년으로 1.67%였고 가장 작았던 해는 1919년으로 0.54%이었다. 현재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이 13%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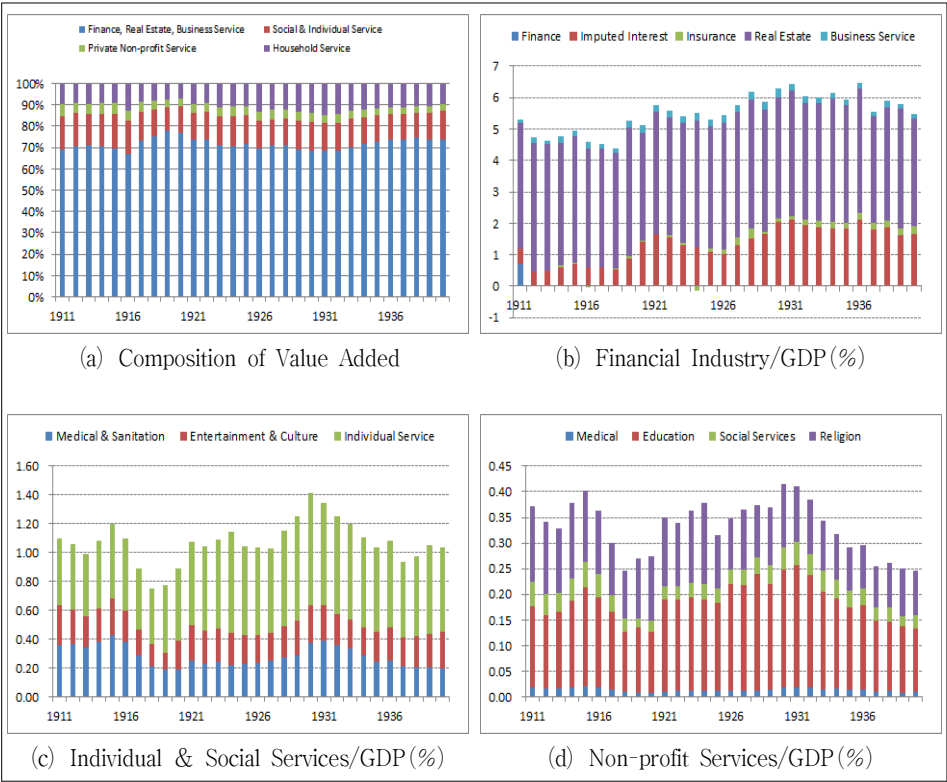
〈Figure 9〉에는 기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나타나 있다. 기타 서비스업에는 의료·보건, 교육·문화·오락, 금융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Figure 9〉(a)에는 기타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의 부가가치 구성비가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보험·부동산 사업서비스의 부가가치가 기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12~15%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가사서비스의 부가가치가 10% 내외 그리고 민간비영리서비스의 비중은 대부분의 해에 5% 이하였다.

GDP대비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Figure 9〉(b)에 나타나 있다. 금융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크기가 가장 큰 업종은 부동산 및 주택소유로 부가가치가 GDP의 3~4%이고 귀속이자자 GDP의 0.5~2% 정도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금융업, 보험업, 사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Figure 9〉(c)에 나타나 있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의 부가가치는 개인서비스업에서 GDP의 0.42~0.68%로 가장 컸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의료·보건서비스로 GDP대비 비중이 0.19~0.43%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의료·보건서비스의 비중은 무시할 수 있을 정

도로 작았을 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었다.

〈Figure 9〉 Value Added of Other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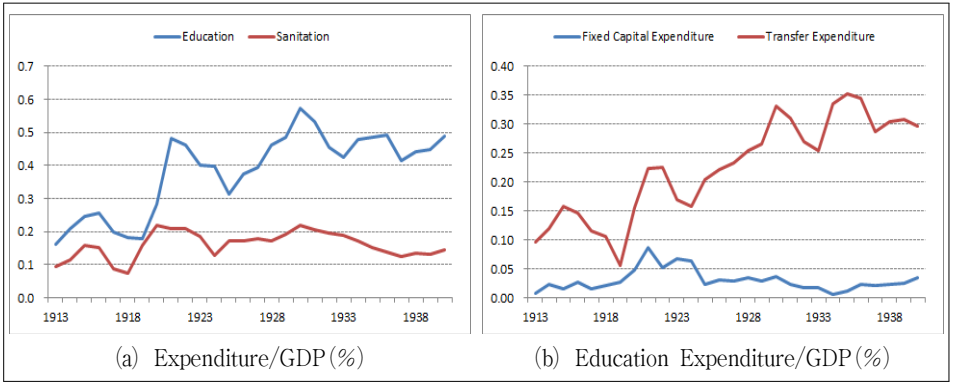


Source: ibid.

민간비영리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큰 부가가치를 생산한 것은 교육이었다.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서비스의 부가가치는 0.12~0.24%였다.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서비스의 부가가치 또한 미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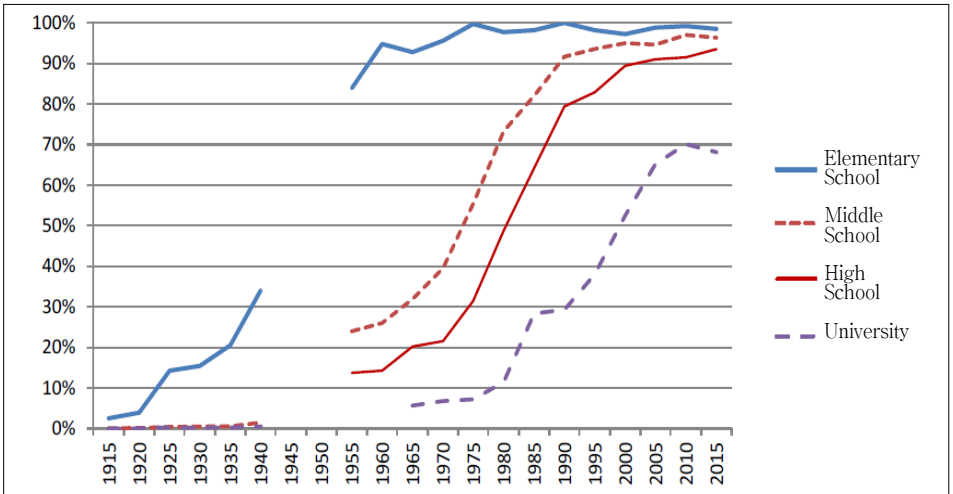
총독부의 교육 및 보건지출의 GDP대비 비중이 〈Figure 10〉에 나타나 있다. 총독부의 교육지출은 1920년 2배 이상 증가한 다음 대략 GDP의 0.4% 정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총독부의 교육지출의 대부분은 〈Figure 10〉(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전지출이었다.

〈Figure 10〉 Education-Sanitation Expenditure of the Colonial Government



Source: ibid.

〈Figure 11〉 Enrollment Rate



Source: Kim Nak Nyeon (2016).

참고로 각급 학교취학률이 〈Figure 11〉에 나타나 있다. 식민지기 초등학교 취학률은 1940년 35% 정도까지 근접하였다. 그러나 중학교(고등학교 포함)와 대학취학률은 매우 낮았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해방 이후 군정청의 학교설립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크게 증가하였고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1965년에는 90%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취학률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에 근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며 대학취학률은

2010년경 70%까지 상승하였다.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보건·의료비 지출의 비중은 〈Figure 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오락비보다 약간 높으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업의 부가가치는 〈Figure 9〉(c)~(d)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의 0.2~0.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총독부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GDP의 0.1~0.2%이고 교육비지출과 같이 이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식민지기의 인적 유산과 고도성장

지금까지 식민지기 가계의 교육과 보건지출, 교육업과 보건업의 부가가치 그리고 총독부의 교육 및 보건지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계의 교육·문화·오락 및 의료·보건 지출은 총독부의 지출보다 훨씬 크다. 이는 모두에서 인용한 차명수의 인식이 옳다면 그것은 일본제국주의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라기보다 식민지 대중이 성취한 건강과 지식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과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점이다. 이 정도의 지출로 대중을 건강하고 유식하게 해줬다고 주장하는 것, 나아가 고도성장을 因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쳐 보인다. 〈Figure 11〉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한국인이 유식해진 것은 오히려 해방 이후 스스로의 교육 투자를 통해서라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적 자본이 경제발전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보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식민지기 초등교육은 〈Figure 11〉에서 볼 수 있듯이 취학률이 35%가량으로 세 명 가운데 한 명만이 받을 수 있는 선민교육이었다. 선민교육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으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 적이 거의 없다. 노동인구의 대부분이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와 같은 교육이 유용하다고 느낄 때 교육은 비로소 경제발전에 유익하게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루카스(2002)의 다음 구절은 되새겨볼 만하다.

“... Growth in the stock of useful knowledge does not generate sustained improvement in living standards unless it raises the return to investing in human capital in most families. This condition is a statement about the nature of the stock of knowledge that is required, about the kind of

knowledge that is “useful.” But more centrally, it is a statement about the nature of the society. For income growth to occur in a society, a large fraction of people must experience changes in the possible lives they imagine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and these new visions of possible futures must have enough force to lead them to change the way they behave, the number of children they have, and the hopes they invest in these children: the way they allocate their time.”(Lucas, 2002, p.17)

식민지기의 인적 유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할 것은 한국의 고도성장에서 박정희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박정희를 식민지기의 가장 특기할만한 상품이라는 인식,²⁴⁾ 그리고 그가 있었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가능하였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약하다고 본다. 박정희가 없었더라도 경제성장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²⁵⁾ 실제로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권 말기에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성장률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박정희가 민주당의 경제개발계획을 그대로 이어 받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고도성장의 원인은 박정희가 아닌 것이다. 중국의 빠른 성장이 등소평이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듯 한국의 빠른 성장이 박정희가 이룬 것이라고 하면 고도성장의 원인을 잘 못 파악한 것이다. 다만 이들은 고도성장의 필요조건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의 역할이 없었다면 고도성장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진실에 가깝지만 박정희가 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한다.

3. 총독부의 역할과 고도성장

총독부의 재정이 <Figure 12>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기업들을 포함한 총독부의 세입과 세출은 192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나 공기업들을 포함한 총독부의 예산은 1940년까지 흑자였다. 이를 총독부와 공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면 <Figure 12>의 (b)~(d)와 같다. 먼저 <Figure 12>(b)에서 볼 수 있듯이 총독부의 재정은 1930~1932년의 3년 간 적자이고 다른 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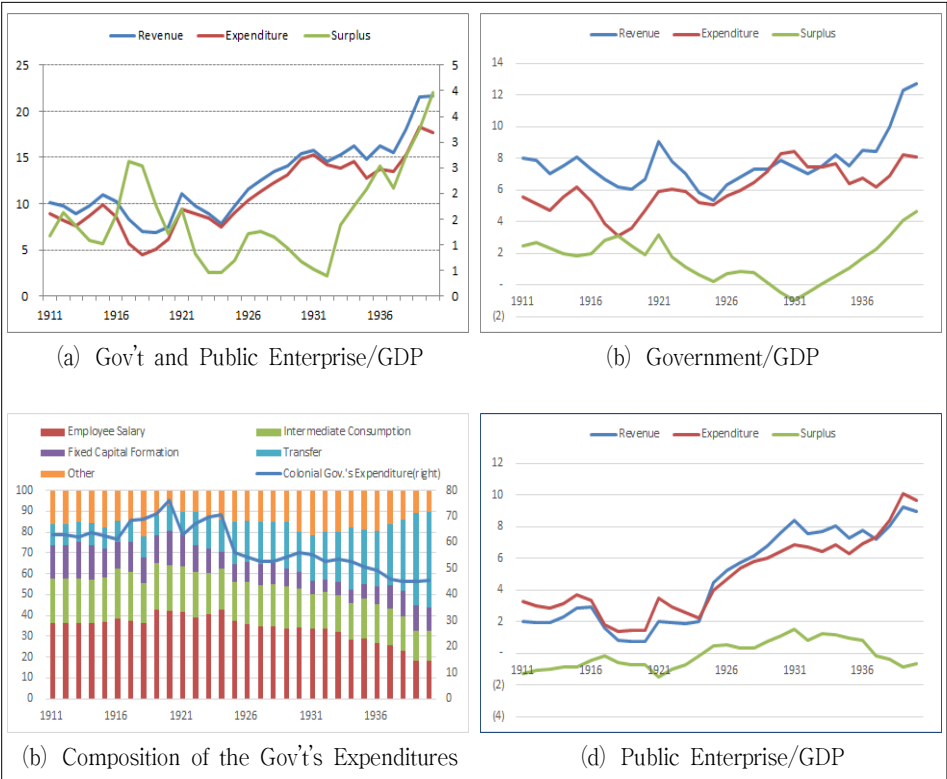
24) 차명수(2014, p.205).

25) 이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Cho (2016)를 참조할 수 있다.

흑자였다. <Figure 12> (c) 에 볼 수 있는 총독부의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1935년까지 피용자보수이고 그 이후에는 이전지출이었다. 그리고 총독부의 세출은 공기업의 지출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였다.

공기업의 지출이 <Figure 12> (d) 에 나타나 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수입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된다. 그리고 공기업의 수입과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는 1925년부터 공기업의 잉여는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가 중일전쟁이 시작될 무렵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공기업의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923년까지는 고정자본형성 그 이후에는 중간소비이다. 피용자 보수도 1934년까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Figure 12> Budget of the Colonial Government



Source: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총독부의 역할과 고도성장

식민지기 총독부 정책의 일관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1920년 회사령이 폐지되기 전까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²⁶⁾ 그러나 억압적인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3.1운동 이후 소위 문화정책이 시행되고 회사령이 폐지된 이후에는 중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 경제활동에 총독부의 개입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일전쟁이후에는 태평양전쟁이 끝나기까지 통제경제였다. 그리고 통제의 정도는 전쟁이 진행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식민지기 정부의 역할에 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식민지기 정부와 고도성장기 정부의 공통점으로 강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견해들이 있다.²⁷⁾ 박정희가 식민지 총독부의 강한 정부를 롤 모델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가능하였으며 따라서 한국경제발전의 원형이 식민지기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천박한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만 그와 같은 주장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불가사의하다. 이와 같은 주장은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전혀 없는 무지한 인사들의 것이며 바른 방향의 리더십과 강한 정부를 혼동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고개를 들고 보라 세계에 강한 정부가 한 둘인가. 왜 그들은 정제하고 있을까?

둘째, 야경국가론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차명수(2014)를 들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조선 총독부와 박정희의 통치는 전혀 다른 발상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조선 총독부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를 바탕으로 한 야경국가(night watchman state)였다면 박정희의 정부는 국가 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ism)에 근거를 둔 개발국가(development state)였다.”(차명수, 2014, p. 206)

“...1910-90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경제 성장을 40개국과 비교해 보면, 식민지 조선과 한국이 이룩한 고도 성장의 원인이 일본이 식민 지배를 위해 건설한 제도적 환경, 그리고 보다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차명수, 2014, p. 22)

26) 회사령은 1916년부터 약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Woo(1991), Kohli(1993).

“... 식민지기에 초등학교 건설이 느렸던 이유는 지주들이 공공 재정을 통한 교육 보급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해방과 더불어 소작제도가 무너지고 지주 세력이 사라지자 정부는 중등 교육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고도 성장기 중등 교육확산의 원동력이 되었다.”(차명수, 2014, p.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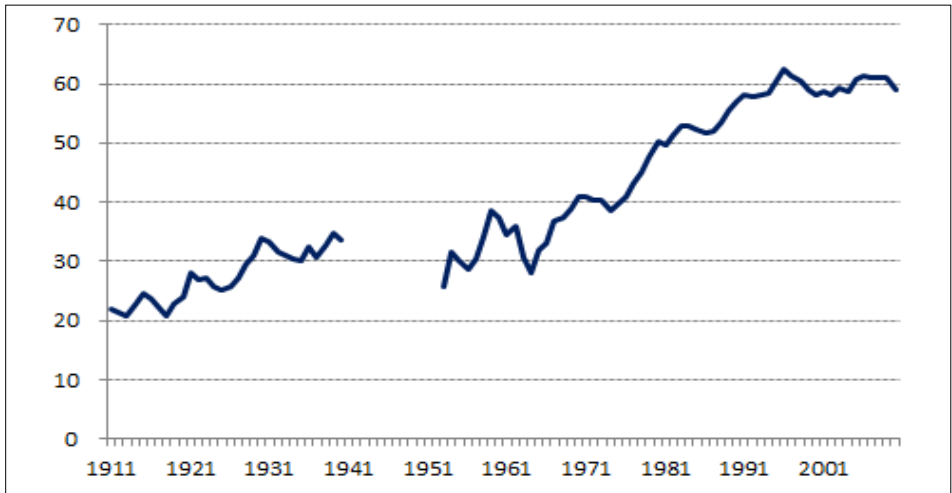
차명수가 야경국가론을 주장하는 근거는 <Figure 12> (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식민지기 총독부의 재정지출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재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독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적어도 세 번의 변화를 겪는다. 특히 회사령이 존재한 시기와 중일전쟁이후 통제경제시기의 총독부를 자유방임을 기본으로 하는 야경국가로 규정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이 시기에 총독부를 야경국가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 시기는 식민지 지배기간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총독부를 야경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차명수(2014)는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계량적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다. 먼저 표 3-1 (p. 105)에서 그는 성장회계를 통해 1911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 자본, 토지, 기술의 성장기여도를 측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식민지기의 기술진보율 곧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6% 포인트, 1960년 이후에는 2.5~2.7% 포인트이고 식민지기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의 2/3는 기술진보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식민지기에 성장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²⁸⁾

그러나 차명수의 성장회계에는 작지 않은 오류가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소득분배율이다. 그는 1911-1940년의 노동소득분배율을 52%, 1960-2010년에는 69%라고 가정하고 있다. <Figure 13>에는 김낙년(2012)이 추정 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시계열이 나타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50%가 넘는 것은 1980년대 초반이고 60%에 이른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는 추세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차명수의 성장회계는 바르지 않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의 구간을 세분화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왜곡을 제거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믿을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8) <Figure 1>을 보라. 과연 식민지기의 기적은 어떤 것이었을까? 빈곤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큰 것이었을까?

〈Figure 13〉 Labor Share(%)



Source: ibid.

차명수(2014)가 성장회계만 이용한 것이 아니다. 수시로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의 표 4-1을 보자. 이 표에는 191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자료를 5년 단위로 나누어²⁹⁾ 좌측에 1인당 생산증가율을 놓고 설명변수로 5년마다 초기의 생활수준, 초등학교취학률, 15-64세 인구비율, 평균관세율, GDP대비 재정지출 비율, 상수항을 사용하여 행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평균관세율과 재정지출비율의 추정계수는 마이너스이고 유의하다. 따라서 저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박정희의 산업 정책이 고도 성장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나 믿음에는 근거가 거의 없다. 산업 정책이 제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설사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것이 아니었음을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알려준다.”(차명수, 2014, p. 221)

다시 말해 평균관세율과 GDP대비 정부지출의 비율이 식민지기보다 박정희 시대에 더 높기 때문에 그의 산업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회

29) 1940-1954년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귀분석에서 평균관세율과 정부지출의 계수가 산업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회귀분석은 흔히 하는 것이지만 관세율은 무역정책과 개방화의 정도, GDP대비 정부지출의 비중은 정부의 크기의 척도이지 이 변수들을 산업정책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다. 이 변수들이 어떤 산업정책을 대변한다는 말인가?

이와 같은 무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욱 치명적이다. 그의 표 7-4에는 일인당 생산증가율을 위에서와 같은 기간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세계 41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설명변수는 초기 일인당 생산수준, 정부지출/GDP (A), 평균관세율(B), $A \times B$, 초등학교취학률, 15-64세 인구비중, 조사망률, 전후 더미, 이차대전 더미, 대공황 더미, 일본 더미, 동아시아 더미, 상수항이다. 여기서 일본 더미는 일본과 식민지 통치를 받은 한국, 대만에 대하여만 1의 값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일본 더미의 계수추정치는 0.037이고 유의하다. 차명수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일본”의 계수 추정치는 양수이다. 이는 조선 총독부가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식민지기 조선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제4장에서 주장의 타당성을 보이는 한 증거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기의 제도적 유산이 해방 후 한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차명수, 2014, p.385)

어떻게 더미에서 이렇게도 많은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지가 경이롭다. 위의 일본 더미는 세 나라의 성장경로가 유사하다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총독부의 공공정책이 등장하고 제도의 이식을 유추할 수 있는지 상상력의 과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⁰⁾

지금까지 식민지기 정부의 역할이 고도성장기 정부와 그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가 정부의 역할을 통해 고도성장에 기여했다는 증거나 설득력 있는 이론을 발견하기 어렵다. 강한 정부의 유형에는 무수히 많은 변형이 있으며 강한 정부가 반드시 경제개발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주장들은 오히려 식민지 통치에 대한 혼란만 야기하고 식민지기 경

30) 이 세 나라의 성장경로가 왜 유사한가에 대하여는 Cho (2016)에 이론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제성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어렵게 하는 주장들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4. 제도의 이식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지배를 통해 자본주의제도를 이식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발전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학계와 일반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영훈(2016b)³¹⁾이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제도는 사유재산 제도를 포함하여 방대하다. 그러나 식민지기 혹은 일본제국주의가 남기고 간 제도가 한국의 고도성장에 바탕이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만 한다.

첫째, 모두에서 언급한 역사의 일회성 문제다. 다시 말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으며 한국인이 독립을 유지했다면 제도의 도입이 없었거나 매우 느려서 1960년대에도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문이다. 실현되지 않은 역사를 두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답은 없다. 그러나 19세기 침체한 이씨 조선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근대적인 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했거나 매우 느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역사를 거꾸로 연장해서 보면 반드시 그랬을 것 같지도 않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한국만큼 빠르게 달성한 경우가 있었는가? 그런 역사가 20세기 초반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일본제국주의 사학자들에 의한 식민사관에서 밖에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에 심은 제도를 시혜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 지배는 결코 돈 되는 일이 아니었다.”(차명수, 2014, p. 202)는 주장과 같이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이 조선을 병탄했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이영훈(2016, p. 10)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을 영구병탄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민지 지배를 구상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경제적인 득이 없다고 생각되는 선택을 일본이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1) 이영훈(2016b), pp. 25-127.

셋째, 제도는 경제발전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도가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조건 곧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좋은 제도가 없이 경제발전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좋지만 좋은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반드시 경제발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발전의 필요충분조건으로는 좋은 제도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노동력, 리더십과 같은 내재적 요소, 곧 경제발전의 주체들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제도는 경제발전을 고양하는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³²⁾ 일본의 1인당 GDP증가율이 〈Figure 14〉(a)에 나타나 있다. 1911년부터 1944년까지 일본의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1.9%였다. 그리고 〈Figure 14〉(b)에서 보듯이 이 기간 일본의 1인당 GDP가 당시의 세계 선도국 미국의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초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대공황,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대공황의 영향을 덜 받았고 전쟁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따라잡기가 일어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다.³³⁾

일본이 본격적인 따라잡기를 시작하는 것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경부터이다. 그렇다면 왜 이때부터 선도국 따라잡기가 일어난 것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애초 일본을 초원국가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고 공산화의 바람이 불자 미국은 일본을 부흥시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철저한 제도개혁을 실시한다.³⁴⁾ 둘째, 당시 일본은 잘 훈련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1950년 농업인구는 48.5%였고 농촌인구는 62%였다.³⁵⁾ 산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인 제도와 잘

32) 이와 같은 견해는 Hayashi and Prescott (2008)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점령군의 개혁에 따라 비로소 일본의 농촌인구가 공업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일본의 고도성장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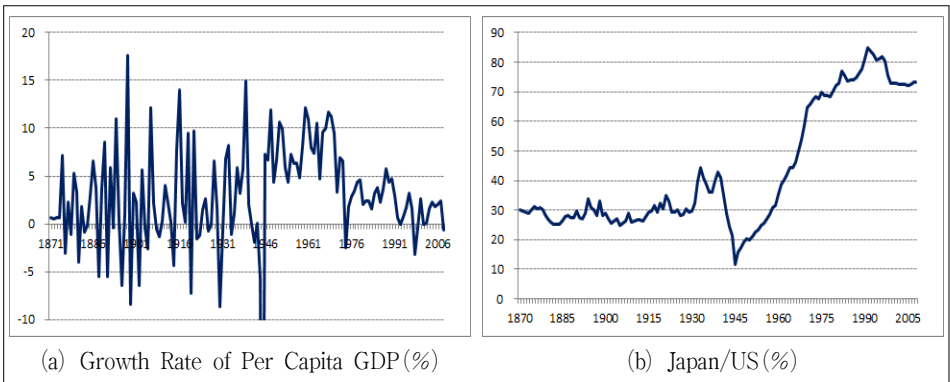
33)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Figure 1〉에 나타나 있는 식민지 남한의 1인당 GDP에서도 선도국 따라잡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34) 전후 일본의 제도개혁에 관하여는 Nakamura (1995), 서정익 (2003)을 참조할 수 있다.

35) 여기서 주목하여야 하여야 할 것은 2차 대전이 끝날 즈음 일본은 근본적으로 (반산업화된 (semi-industrialized)) 농업국가였다는 점이다. 종전 후 일본의 농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의 48.5%였으며 2차, 3차 산업 종사자는 각각 고용의 21.8%, 29.6%였다. 1950년 일본의 농촌인구는 62%에 달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United States Strategic Bombing Survey (1946)와 Hirschleifer (1963) 참조.

훈련된 노동력이 갖추어진 것이다.³⁶⁾ 셋째, 제도개혁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불황이 닥칠 즈음에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전쟁 특수가 일어났다. 20세기 후반 일본의 기적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철저한 시장개혁과 내재적인 능력 그리고 운이 작용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Figure 14〉 Japanese Economic Growth



Source: Maddison-Project <http://www.ggdcc.net/maddison/maddison-project/home.htm>, 2013 version.

한국의 고도성장도 거의 유사한 경로를 통해 일어났다. 해방과 전쟁을 통해 경제 발전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잔재가 대부분 제거되고 미군정 그리고 미군의 참전과 주둔으로 미국의 제도가 대거 유입되었다. 해방이후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은 〈Figure 1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내적 능력도 성숙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의 특수라는 운도 따라 주었다.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제도의 이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일본과 한국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해 한국의 고도성장이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식민지에 주목하는 것은 시선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36) 일본의 전후 개혁과 부흥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는 Cho(2016)를 참조할 수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정리되어 있는 식민지기 자료를 바탕으로 (1) 과연 식민지기에 경제성장이 있었는지, 나아가 (2)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이 한국의 고도성장을 인과(因果)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식민지기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의 가난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라는 점을 피력하였다.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와 소비에서 차지하는 식료품과 의류 같은 비내구재의 비중 그리고 1차 산업 인구 등에 변화는 있지만 매우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식민지기 기층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판단은 거시 자료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기 기층 대중의 경제적인 삶이 개선되었는지, 개선되었다면 얼마만큼의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미시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례연구를 무분별하게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싶다. 예를 들어 많은 수탈론의 저자들은 사례를 들어 스스로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은 경우 사례연구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Eckert (1991)의 경성방직에 대한 사례연구는 식민지기 한국인 기업의 성장에 총독부 나아가 일본이 어떤 역할과 제약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모두에 인용한 그의 저서 마지막 구절은 적절한 연구와 근거도 없이 식민지배가 고도성장을 인과하였다는 무책임한 암시를 하고 있다. 사례연구는 좋은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극단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만 한다.

둘째, 식민지기의 공업 성장에 관한 글들을 읽다 보면 식민지기의 공업화가 기층민과 유리되어 일어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된다. 물론 식민지기 조선인 공업의 성장도 있었지만 특히 일본의 투자에 의한 대기업들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바꾸어 말해 식민지기 공업화가 고용과 분배, 생산되는 제품에 있어 얼마나 기층 민중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층민의 물질적 삶이 조선 후기, 식민지기, 그리고 해방 이후까지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하였는지가 연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관하여는 역사학자 Fernand Braudel (1981, 1982, 1984)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역사를 시간의 긴 축 위에 쌓인 세 개의 계서(階序, hierarchy)로 파악하고 가장 아래에 민중의 물질적 삶(물질문명)을, 중간층에 시장경제를 그리고 가장 위층에 자본주의를 두었다. 그리고 위층으로 갈수록 변화가 빠르고 아래로 갈수록 느리다고 보았다. 민중의 삶은 생활관습과, 음식, 의복 등 장기 지속적인 특성 때문에 변화가 느리게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무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는 이익의 틈새를 언제 어느 때나 파고든다는 점에서 가장 변화가 심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식민지기를 보면 느리게 변화하여 해방 이후까지 살아남은, 조선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기층민의 삶이 있고 그 위에 형성되는 시장경제와 식민지의 환경을 이용하려는 변화무쌍한 자본주의의 침투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³⁷⁾

이와 같은 Braudel의 전사적(全史的, total history) 접근을 일제식민지기의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데이터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난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 최근 이영훈(2016a, 2016b)은 한국경제사를 서술함에 있어 명시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그는 해방 후 농지개혁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³⁸⁾

“역사의 긴 안목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17세기 이래 20세기 전반까지 장기추세로 진행되어 온 소농경제小農經濟의 발전을 전제하고 계승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성숙한 소농경제를 전제하지 않은 토지개혁은 중남미와 아시아의 여러 후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성공하기 힘들다. … 그에 비하자면 한국의 농지개혁은 역사적으로 성장해 온 소농의 생산형태와 생산력을 있는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그로 인해 큰 혼란을 겪지 않고 급속한 증산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이영훈, 2016b, p. 320)

기층민의 물질적 삶과 그 장기 지속성에 기초한 이와 같은 이해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었다. 물적, 인적 유산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인과하기에는 투자가 지나치게 적었고 물적 유산의 경우에는 남한에 남겨진 생산시설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그리고 6.25전쟁을 치르면서 대부분 소실되었다. 인적 유산의 경우 해방 후 1960년대 중반까지 교육을 통해 축적

37) 이에 대한 개략적 소개로는 Braudel(1978)과 주경철(1999)이 있다.

38) 소농경제의 성립과 발전에 관하여는 이영훈(2016b)의 6장을 참조할 수 있다.

된 인적 자본과 비교하면 식민지기 인적 자본의 축적은 무시할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자체가 고도성장을 일으킬 만한 것은 못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총독부와 박정희 정부를 강한 정부로 엮는 것은 건강부회일 뿐이다. 제도의 경우에도 그것이 필수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내재적 발전요인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에 머문다는 점, 그리고 패전 이전 일본의 제도가 발전을 유인하는 유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식민지기의 제도를 고도성장의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역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무시한다 해도 섭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정리한 장기 데이터와 자료들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역사의 연구가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고 행해진다는 것은 바라보기만 해도 즐겁다는 것을 피력하고 싶다. 그러나 자료의 발굴과 해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은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특히 식민지배와 같은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편적 사실이 일반화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면적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그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많은 이들이 식민지 경제사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에서도 가끔은 미래를 바라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1. 김낙년(편), 『한국의 장기통계』,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on(ed.),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Revised,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2.
2. 김낙년, “한국의 장기성장: 장기추이와 국제비교,” 낙성대경제연구소 W.P. 201603 (02),

2016.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on, “Long Run Growth in Korea: Trend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W.P. 201603 (02),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2016.

3. 박 섭 · 정태현 · 박현모 · 김용직 · 정윤재,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 백산서당, 2004.

(Translated in English) Park, Sub, Tae-Hun Chung, Hyun-Mo Park, Yong Jik Kim and Yun Jae Chung, *To Understand and Criticise the Theory of Colonial Development*, Baeksanseodang, 2004.

4. 서정익, 『일본근대경제사』, 해안, 2003.

(Translated in English) Seo, Jung Ik, *The History of Modern Japanese Economy*, Haeon, 2003.

5. 선제원, 노동시장제도, 안병직(편), 『한국경제성장사 - 예비적 고찰-』, 제8장,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 291-327.

(Translated in English) Sun, Jae Won, “Labor Market Institutions,” in, Ahn Byung Jik (ed.),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rowth - Preliminary Study-*, Chap. 8,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1, pp. 291-327.

6. 신용하, 『일제 식민지정책과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문학과지성사, 2006.

(Translated in English) Shin, Yong Ha, *Colonial Policy by Imperial Japan and Criticism of the Theory on Colonial Development*, Munhakkwajisungsa, 2006.

7. 안병직(편), 『韓國經濟成長史 - 예비적 고찰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Translated in English) Ahn, Byung Jik (ed.),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rowth - Preliminary Stud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1.

8. 安秉直 · 中村哲, 『近代朝鮮工業化의 研究』, 一潮閣, 1993.

(Translated in English) Ahn, Byung Jik and Chul Jungchon, *Study on Modern Korean Industrialization*, Ilchogak, 1993.

9. 安秉直 · 李大根 · 中村哲 · 梶村秀樹, 『近代朝鮮의 經濟構造』, 비봉출판사, 1990.

(Translated in English) Ahn, Byung Jik, Dae Keun Lee, Chul Jungchon, and Susu Michon, *Economic Structure of Modern Korea*, Beebongchulpansa, 1990.

10. 이대근(편),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조선후기에서 20세기 고도성장까지』, 나남, 2005.

(Translated in English) Lee, Dae Keun (ed.), *New History of Korean Development: From Late Chosun to the Rapid Growth in the 20th Century*, Nanam, 2005.

11. 이영훈, 『한국경제사 I: 한국인의 역사적 전개』, 일조각, 2016a.

(Translated in English) Lee, Young Hoon, *Korean Economic History I: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s*, Ilchogak, 2016a.

12. _____, 『한국경제사 II: 근대의 이식과 전통의 탈바꿈』, 일조각, 2016b.

(Translated in English) Lee, Young Hoon, *Korean Economic History II: Import of Modern System and Transformation of Tradition*, Ilchogak, 2016b.

13. 주경철,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문학과지성사, 1999.

- (Translated in English) Chu, Kyung Chul, *History's Memory and History's Imagination*, Munhakkwajisungsa, 1999.
14. 차명수, “우리나라의 생활수준, 1700-2000,” 안병직(편), 『한국경제성장사 -예비적 고찰-』, 제 1장,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 3-31.
(Translated in English) Cha, Myung Soo, “Korea's Standard of Living, 1700-2000,” in, Ahn Byung Jik (ed.),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rowth - Preliminary Study-*, Chap.8,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1, pp.3-31.
 15. _____, 『기아와 기적의 기원』, 해남, 2014.
(Translated in English) Cha, Myung Soo, *The Origin of Poverty and Miracle*, Haenam, 2014.
 16. 한국은행, 『숫자로 본 광복 60년』, 2005.
(Translated in English) Bank of Korea, *60 Years of Liberation by Numbers*, 2005.
 17. 허수열, 『개발없는 개발: 일제하, 조선경제개발의 현상과 본질』, 은행나무, 2005.
(Translated in English) Hur, Soo Yeul, *Development without Development: The Phenomenon and Nature of Korean Developmen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Eunhangnamu, 2005.
 18. Braudel, Fernand, *Afterthoughts on Material Civilization and Capitalism*, Patricia M. Ranum(tr.),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19. Braudel, Fernand,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 - 18th Centuries*, Vol. 1: The Structures of Everyday Life, Siân Reynolds(tr.), Harper and Row, 1981.
 20. _____, 15th - 18th Centuries, Vol. II: The Wheels of Commerce, Siân Reynolds(tr.), Harper and Row, 1982.
 21. _____, 15th - 18th Centuries, Vol. III: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Siân Reynolds(tr.), Harper and Row, 1984.
 22. Cho, Jang-Ok, “How was the Korean Miracle Made? A Theoretical Perspective,” manuscript, Sogang University, 2015.
 23. Cho, Jang-Ok, “The Rise and Fall of Miracles,”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 27, No. 2, 2016, pp.1-38.
 24. Eckert, Carter J.,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8-1945*,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25. Hayashi, Fumio and Edward C. Prescott, “The Depressing Effect of Agricultural Institutions on the Prewar Japanese Econom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6, No. 4, 2008, pp.573-632.
 26. Hirshleifer, Jack, “Disaster and Recovery: A Historical Survey,” Memorandum RM-3079-PR, Rand Corporation, 1963.
 27. Kohli, Atul, “Where do High Growth Political Economies Come From. The Japanese Lineage of Korea,” *World Development*, Vol. 22, No. 9, pp.1269-1293.
 28. Lucas, Robert E., Jr., *Lectures on Economic Growth*,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29. Nakamura, Takafusa, *The Postwar Japanese Economy*, 2nd ed.,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95.

30. Parente, Stephen L. and Edward C. Prescott, *Barriers to Riches*, MIT Press, 2000.
31. Rostow, Walter 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32. Solow, Robert M.,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70, No. 1, 1956, pp. 65-94.
33. Solow, Robert M., "Technical Change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39, pp. 312-320.
34. United States Strategic Bombing Survey, *The Effect of Strategic Bombing on Japan's War Economy*, Washington D.C.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6.
35. Woo, Jung-en,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Macroeconomic Assessment of Colonial Development in Korea*

Jang Ok Cho**

Abstract

By looking into the data collected by the scholars at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e ask the following two questions on the colonial development in Korea. (1) Was Korea developed economically during the colonial rule of Imperial Japan? (2) Did the colonial development cause the rapid growth after mid-1960s? Th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is conditionally affirmative in the sense that the development was not enough to remove the poverty in colonial Korea. The fraction of consumption in GDP was very high and that of basic foodstuffs and clothing in consumption was also sustained high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most of Korean people stayed in agricultural sector. The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is definitely negative. Firstly, physical capital accumulated in South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had not been much and wiped away after WWII and during Korean War. Secondly, human capital was not accumulated so much as to cause the rapid growth since mid-1960s. Thirdly, the whole story relating the colonial rule to the strong government of Park Chung Hee has been far-fetched. Lastly, institutions are not sufficient but necessary for a rapid growth. Furthermore, Japanese institutions were not the ones enhancing economic development. In sum, the colonial rule by Imperial Japan helped Korea little with the rapid growth since mid-1960s.

Key Words: colonial modernization, human capital, institution

JEL Classification: E6, N1

Received: Feb. 22, 2017. Revised: March 15, 2017. Accepted: March 22, 2017.

* This paper is a written version of the Presidential Address. I thank the members of the Korea Economic Association, without whose support I wouldn't have successfully finished my duty as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Professor Pyung Joo Kim, my former advisor and mentor, and Professor Seung-Hoon Lee, who has always been willing to help his younger colleagues. I thank Mr. Dukhoon Lee, Mr. Kwangkoo Lee, Mr. Daeyoung Sung, Mr. Seongyeol Hong, Mr. Jakwan Koo, and other Institution Members who financially supported the association. I also thank Professor Doyoung Kim, other secretaries, and Ms. Sunhwa Park, the operation director of the association. Finally I thank Professor Joo-Ha Nam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or his devotion to me and the association. I appreciate the incisive comments from two anonymous referees and the associate editor. All remaining errors are mine.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Korea, Phone: +82-2-705-8769, e-mail: choj@sogang.ac.kr